

건설 재해 저감, '건설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

- 근로자의 잦은 이동과 대다수의 현장이 소규모라는 건설산업 특성 고려해야 -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전반적 감소세에 반해

건설 재해 증가

2005년 0.77%이던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2011년 0.65%까지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의 건설업 재해율은 0.75%에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0.74%로 높아졌다. 건

설업 사망자 수 역시 2009년 이래 다시 증가해 2011년에는 621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산재 증가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7.9%에서 7.2%

로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 → 24.4%, 24.4 → 29.4%)하였다.

새로운 건설 재해 저감

접근 방식 필요

건설현장 재해가 줄지 않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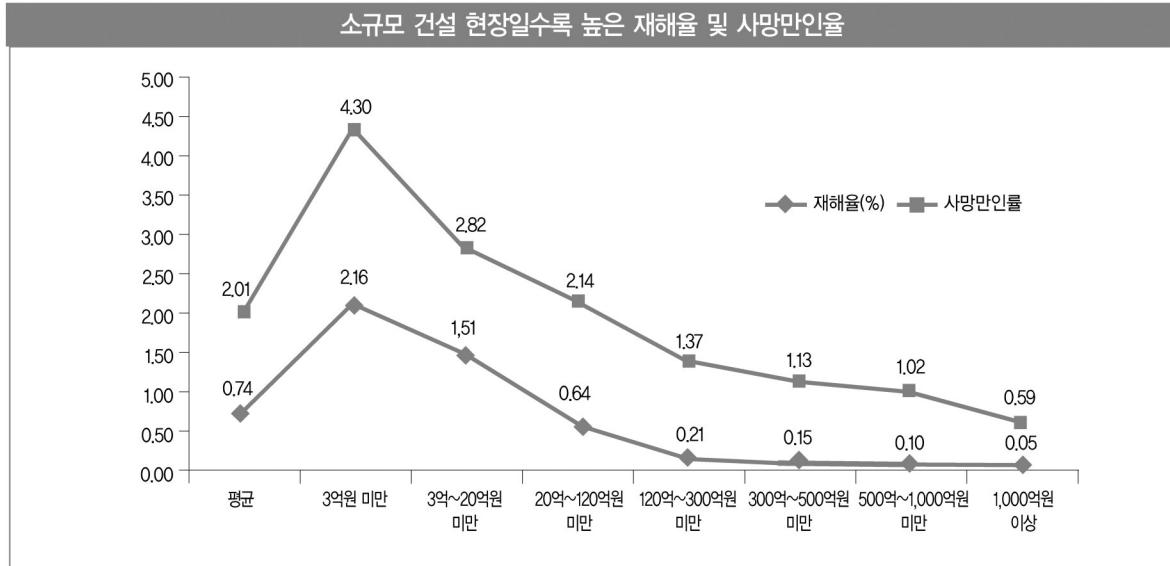
연도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해율	전 산업	0.77	0.77	0.72	0.71	0.70	0.69	0.65
	건설업	0.75	0.70	0.66	0.63	0.65	0.70	0.74
재해자 수	전 산업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건설업	15,918	17,955	19,050	20,473	20,998	22,504	22,782
	구성비	18.6	20.0	21.1	21.4	21.5	22.8	24.4
사망자 수	전 산업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2,114
	건설업	609	631	630	669	606	611	621
	구성비	24.4	25.7	26.2	27.6	27.8	27.8	29.4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		7.9	7.9	7.9	7.7	7.3	7.4	7.2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각 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경영 정보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 통계 DB.

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양한 논의의 핵심은 '건설업 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 원인은 현행 방식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유는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기존의 건설 안전 정책이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적합한 정책 방향'에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고정된 사업장 및 정규 근로자 위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가 일시적 사업장 및 비정규

근로자, 그리고 다수의 당사자로 구성된 건설 현장의 특성과 괴리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안전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채 현행 건설 안전 정책은 주로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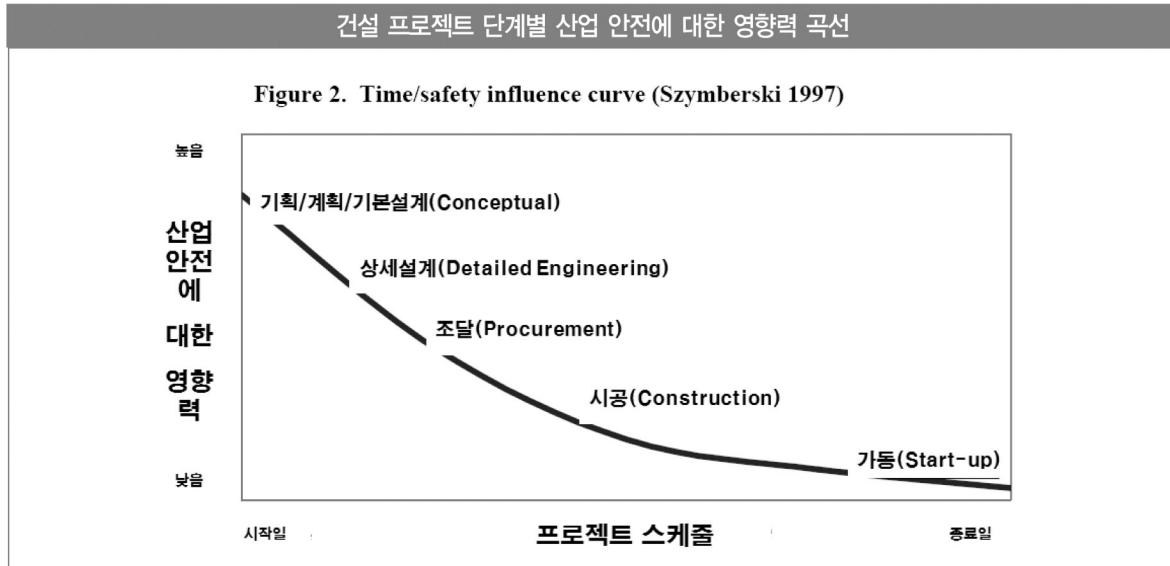
특히, 고정된 사업장 및 정규 근로자 위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로는 숫자가 많고 근로자의 이동이 더욱 잦은 소규모 현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일

하는 근로자 수는 29.8%이나 건설 재해자 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연중 생성·소멸하는 사업장 수는 약 68만 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을 통해 재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재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요소(안전모·안전화·안전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공급조차 미흡하다.

그 결과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한다.



자료 : Szymberski, R(1997), Construction Project Safety Planning, TAPPI Journal, 80(11) : 69-74.

한편,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추락 방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가운데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 안전 역할 분담도 적절치 못하다.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산업 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 특성 반영한

'건설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건설안전 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의미한다. 첫째, 기초 안전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 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해 '증복과 누락'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본적인 산업 안전 소양과 보호 장비를 갖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산업 안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산업 안전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 을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하수급자의 산업 안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적인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 재해율 관리와 공표를 통하여 하수급자의 산업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CERIK